

“코로나 악몽 재현되나” 숙박·여행업계 긴장

광주·전남 예약 줄고 취소·연기 잇따라...여행심리 위축 우려 8월 출발 항공기 20~30% 취소 “여행업계 손실 보조금 지원을”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국내 또는 해외로 휴가를 계획하던 시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 광주·전남 숙박·여행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 확산세가 급증하자 휴가철 여행을 계획했던 이들이 예약 취소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 회복 기대감으로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었던 숙박·여행업계가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변수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직장인 정모(35·광주시 북구)씨는 8월 말 친구들과 베트남 다낭에 가려고 항공권을 샀지만 최근 고민에 빠졌다. 몇 년만의 해외여행이라 기대했지만, 지난해 확진으로 아프고 고생했던 경험 때문에 최근 재유행으로 불안한 마음이 커져 취소를 고민하게 된 것이다.

정씨는 “취소 수수료가 가까워 불안해도 해외여행을 강행해야 할지 아니면 수수료를 내더라도 취소를 해야 할지 친구들과 논의 중이다”면서 “지금 추세로는 재감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코로나 변이(BA.5) 발생과 여름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으면서 휴가 시즌에 기대를 모았던 광주·전남 숙박·여행업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 광주에서는 1670명(해외유입 34명), 전남에서는 1776명(해외유입 16명)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다. 광주·전남 모두 지난 18일 1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이후 매일 1600여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숙박·여행업계는 재유행 장기화 시 여행심리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숙박과 여행업계 예약이 줄고 있고 실제 일부 단체 행사는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광주시 서구한 대형 숙박업소 관계자는 “아직 예약 취소는 없지만, 수요 자체가 줄고 있다”면서 “재확산 전 주중 70~80개, 주말 90~100개의 객실이 찼지만, 최근 1주일 사이에는 주중 30~40개, 주말 60개 선에서 방들이 차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의 또 다른 대형 호텔 객실지배인은 “5월 이후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학술 및 연회 등 각종 행사 인원이 줄거나 연기 또는 취소되는 사태가 속속 발생하고 객실, 식음료 등 호텔 전체 매출도 15~20% 떨어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여행업계도 걱정이 한가득이다. 코로나 재유행 분위기에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조치가 이뤄지면 하반기에 잡힌 단체 관광 예약마저 대거 취소하는 사태가 일어날까봐 업계에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여행사가 해외여행 전세기(1대당 180여명)를 계약해 관광객을 모집할 경우 두달 전부터 홍보를 하고 고객을 모으는데 예약이 오르지 않아, 할인된 가격에 뿌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60~70%만 태워도 다행이라는 생각에 손해를 보더라도 채워서 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황운석 대표는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 중 하나인 여행업계가 또 다시 재유행에 발목이 잡힐까 우려된다”며 “그나마 올 여름엔 송등을 트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8월 출발 비행기부터는 예약 취소율이 20~30%에 육박하고 있고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여행사 관계자는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게 되면 결국 여행업계는 망하게 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여행업계의 손실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론조사 허위 공표 무혐의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6·1 지방선거 경선 중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공표했다’며 고발당한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서부경찰청 김 청장이 ‘여론조사 결과는 2위인데 1위로 SNS에 알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수사 결과 불충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김 청장은 온라인 홍보물을 통해 자신을 여론조사 1위로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경선 상대였던 서대석 예비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서 예비후보는 ‘컷오프(경선 탈락)된 상황이었다고, 홍보물에 ‘컷오프 제외’라는 문구가 들어있어 거짓 홍보물로 보긴 어렵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김 청장이 1위로 조사됐던 점도 고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주관 기관을 표기하지 않아 선관위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백일의 열정 24일 광주시 서구 매월동 매월호수공원을 찾은 행락객들이 공원에 활짝 핀 배롱나무 꽃을 구경하며 산책을 즐기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마약·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패가 망신’

28일부터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보험금 전액 토해내야

앞으로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의무보험으로 받는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과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나

뉜다. 의무보험 보험금은 대인 최대 1억 5000만원, 대물 2000만원까지 지급되며, 이 한도를 넘는 경우 임의보험으로 보상받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한 건 당 최대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만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해 왔다. 법 개정 이후에는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한도가 사망자 1명당 1억 5000만원, 부상자 1명당 3000만원,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오른다. 대인 사고에 대한 부과 기준도 ‘사고 1건’이 아닌 ‘사망자·부상자 1명’으로 바뀌어 가해자의 부담이 커졌다. 개정안은 28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적용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기숙생 과도한 주말 외출 제한은 ‘인권침해’

인권위, 전남 모 고교생 신청 받아들여

고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주말 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기숙사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24일 전남의 한 사립 고교 학교장에게 기숙사생에 대한 주말 외출 제한조치를 중지하고, 기숙사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비평준화 지역 선별학교인 해당 고교 기숙사 관리규정에 따르면 기숙사생은 1·3·5주차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생에게 별도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지난 3월부터 1·3·5주차 주말에 외출을 제한하고 병원 진료 및 가정사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인권침해라는 기숙사생의 인권위 진정에 학교측

은 “기숙사 관리규정에 ‘전체 귀가는 월 2회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기숙사생 및 통학생은 1·3·5주차 주말에 학교에 남아서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한다는 점을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했다. 학원수강, 종교활동 등을 이유로 주말에 많은 학생이 외출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기숙사생은 월 2회만 주말 귀가가 허용될 뿐 평일에는 학교 일정 밤 10시 40분에 종료돼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학교에 머무는 1·3·5주차 주말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원산지 위반’ 상무지구 음식점 벌금 700만원

광주 상무지구 음식점 업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사용하면서 호주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경민 판사는 지난 20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한 빌딩에서 사부사부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2차례에 걸쳐 미국산 소고기 1166kg을 사들여 자신의 식당에서 조리 후 판매했다. 일정 금액을 내면 ‘소고기 무한 리필’이 가능한 메뉴도 선보였다. 그러나 음식

점 출입구에 부착된 메뉴판에는 ‘호주 정정우 목등심’으로 표기했다. 계산대 벽에 부착된 메뉴판에는 ‘호주산, 미국산’으로 기재했고, 식탁 메뉴판에는 ‘호주 정정우 목등심’으로 각각 기재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 김 판사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하는 범행은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신뢰를 해치고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조리·판매한 음식의 양이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임대 및 특판 안내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객 확보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임대 안내

층	호실	임대면적	호별 위치도
1	101호	27평	1층
	102호	40평	
	103호	51평	
2	201호	27평	2층
	202호	28평	
	203호	43평	
	204호	82평	
3	301호	금남몰란트치과	3층
	302호	72평	
	303호	83평	
4	401호	103평	4층
	402호	72평	
	403호	83평	
5	501호	MG 문화센터 (갤러리 대관 환영)	5층
	502호	MG 골프클럽 (회원 대 모집)	

무궁무진 MGMG 정기예탁금 3.3%

1년

고이율 입출금 통장

개인을 위한 자신탄만자유예탁금 최고 **2.2%**

사업자를 위한 등록기업자유예탁금 최고 **2.5%**

MG골프클럽 특가

구분	이용기간	정상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조건 문의 (영업지원팀)
* 럭키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할인 금액 2만원)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MG금남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임대문의: 영업지원팀 062-223-8007